



주간통일정세 2010-29(2010.07.12~07.1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29

## Contents

- >>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외무성의 입’ 정태양 우간다 대사 임명(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급 외교협상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온 정태양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이 우간다 대사에 임명
  - 방송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 “우간다공화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정태양이 임명됐다”고 밝힘.
  - 정태양은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이 끝날 때 대변인 자격으로 6자회담 무용론을 펴는 내용의 귀국성명을 발표했고,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때는 북한측 입장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한 인물
  - 그는 또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을 지내면서 6자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실무그룹 회의 등에 참가했고, 작년 12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공항 영접과 환송을 맡았음.
  
- **北신문, 연일 노동당 찬양(7/13, 연합신문)**
  - 노동신문이 9월 상순 소집될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연일 노동당을 찬양하는 장문의 논설과 글을 게재
  -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3일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군 앞으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A4 5장 분량)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성스러운 노동당 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길이 빛날 당 대표자회를 맞이하게 된다”면서 당을 ‘향도자’, ‘광명’, ‘생명선’ 등으로 찬양
  - 신문은 이어 “충실한 당원들이 있어 영도자의 권위가 빛나고 당의 위력이 과시된다”면서 과거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했던 ‘항일혁명 투사’와 ‘영웅전사’들의 사례를 열거한 뒤 “당과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조선 노동당원의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오늘날 당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혁명실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면서 “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고 말함.
  - 이 신문은 전날인 12일에도 비슷한 분량의 사설을 실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 건설 업적을 강조하면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라고 밝힘.



- **北…김용삼 전 철도상도 지난해 처형(7/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 앞서 김용삼 전 철도상도 처형했으며, 이들의 사진과 출판물을 파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음.
  -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2008년 9.9절(공화국 창건 60주년)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김용삼 당시 철도상이 처형됐다”면서 “국방위원회 검열에서 서평양 철도국과 함흥 철도국에 보관 중이던 전시에비용 기관차들이 모두 못쓰게 된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위부에 넘겨진 뒤 작년 3월 처단됐다”고 밝힘.
  - 김용삼은 1998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0년간 철도상을 맡아 오다 2008년 10월 별다른 발표없이 현재의 전길수 철도상으로 교체
  - 방송은 이어 신의주 주민의 전언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월 2일 방침’에 따라 처형자들의 사진과 출판물 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방침은 과거 출판보도물을 전반적으로 검열해 처단된 자의 사진과 저작물을 출판검열국 79호실에 넘겨 파기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임.
  
- **北김정일, 평북 간석지와 수산사업소 현지도(7/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말 준공된 평안북도의 대계도간석지와 압록강수산사업소를 현지도
  - 김 위원장은 대계도간석지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고 개간된 간석지 논을 살펴본 후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경지면적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는 것과 함께 새 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석지 개간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대계도간석지는 평안북도 염주군과 철산군 앞바다의 다사도부터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 소계도, 철산반도까지 이어지는 총 13.7km를 독으로 막아 8천800여 정보의 땅을 얻는 공사로 지난달 말 매립공사가 끝남.
  - 김 위원장은 또 압록강수산사업소에 새로 건설한 축양장과 굴 양식장을 현지도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수산물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보다 풍족한 식생활을 마련해주자”고 강조
  - 이번 현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김경희,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리재일이 수행
  
- **김정일 訪中 이후 평양 전력사정 크게 호전(7/15, 북한개혁방송)**
  - 방송은 지난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평양시의 전력사정이 크게 좋아졌다고 전함.



-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인 5월 중순부터 평양시에 하루 11~12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전기’라는 큰 선물을 준 것 같다”고 전함.
- 방송의 김승철 대표는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가장 좋은 곳이 평양이지만 하루 8시간 정도, 그것도 불연속적으로 공급됐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수풍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운데 기존 중국 몫의 일부나 전부를 북한이 사용하게 된 듯하다”고 말함.
- 수풍발전소는 1944년 북·중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력발전소로, 양국은 ‘조·중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해 매년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이사회를 열고 생산된 전력을 나눠 써왔으며, 현재 이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40~60만KW로 보면 이번에 최소 10~15만 KW가 추가로 북한 몫이 된 셈이며, 이는 북한 전체 전력사용량의 10% 가량 된다고 방송은 설명
- 방송은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평양시 전력문제를 해결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평가

#### ● 北, 김정일 동상 첫 공개…군복 착용 모습(7/16,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16일 입수한 5월11일자 ‘조선인민군’을 통해 신문 1면에 ‘백두산 혁명강군의 최대의 특전, 최상의 영광’ 제목의 기사와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김정일 위원장 생모)의 군복 동상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이 군복을 착용한 동상 사진을 공개한 것을 보도
- 그동안 김 위원장의 동상이 노동당 청사와 인민무력부 등 주요기관에 건립돼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동상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은 김 위원장의 동상 뿐 아니라 석고좌상을 만들어 국제친선전람관 등에 전시하고 있으며 이 석고상은 그동안 방북한 남한 방문객이나 외국인들에게 공개돼왔음.
- 방송이 입수한 조선인민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동상은 김 주석, 김정숙 동상과 함께 인민무력부 혁명전시관에 전시됐으며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짐.
- 제막식에서 김정각 제1부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형상된 최고사령관 동지의 ‘군복상 동상’을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받아 안은 최상의 특전이고 행운”이라고 말함.
- 또 이 신문은 동상의 제작과 관련,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 등에서 수령숭배심과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 불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 3대장군의 군복상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었다”고 소개



#### ■ 김정일동향

- 7/12 김정일, 비전향장기수 '김은환'의 80회 생일상 전달(7/13, 중방)
- 7/15 김정일, 지난달 말 준공된 평안북도의 대계도간석지와 압록강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김평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김경희, 태종수와 제1부부장인 리재일이 수행

#### ■ 기타 (대내 정치)

- 南 한상렬목사, 애국열사능과 용약산유원지 방문 및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과 상봉(7/12, 중통)
- 黃北 서흥군 농업근로자들, 7/12 범안협농에서 이명길(농근맹 위원장/보고)·조준학(黃北 농촌경리위원장) 등 참가下 “더 많은 유기질거름을 생산 위한 쫓기모임” 진행(7/13, 중방)
- 만경대혁명사적관에 ‘2중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의식 현지진행(7/14, 중방)
- 北 조선노동당 출판사, ‘김일성 전집 제87권’(1988년1월~12월 사이 김일성의 39건 노작 수록) 출판(7/14, 중방)
-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공장-기업소 쫓기모임,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공장-기업소에서 진행(7/15, 중방)
- 김정일 저작(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은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 대를 세워주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라며 김정일 업적 선전(7/15, 중통·노동신문)
-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무대’, 김정일이 ‘대동강 해맞이’를 발표한 50돌을 맞아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7/15, 중통)
- 경공업·농업·연관 부문 공장·기업소·농장들, 당 대표자회의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7/16, 중방)

### 나. 경제

#### ● 北...경공업생산 작년의 150%로 늘어(7/12, 조선신보; 노동신문; 연합신문)

- 북한이 올해 인민생활 향상의 ‘주공 전선’으로 정한 경공업 부문 생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음.
- 북한 경공업성의 한청수 국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경공업 부문 생산이 작년의 1.5배로 장성(증가)했다”면서 “천, 신발, 내의 생산이 급속히 장성했고 특히 신발은 작년의 160% 이상 된다”고 밝힘. 한 국장은 이어 “작년에 비해 경공업에 대한 국가투자액이 높아져 원료 자재가 잘 보장되니 생산도 장성했다”면서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이 평양 시내 백화점들에 나가고



있는데, 번쩍번쩍하지는(신속하지는) 못해도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임.

-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연간 어려운 조건에서 경공업 공장들이 기술적으로 개선(개선)되고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경공업의 생산 잠재력이 크게 장성(성장)했다”면서 “특히 화학·금속공업을 비롯한 기초공업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주장

### ● 北…쌀값 다시 불안, 청진시 kg당 700원대(7/13, 데일리NK)

- 안정을 찾는 듯했던 북한의 쌀값이 최근 환율 상승과 함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짐.
- 매체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작년 화폐개혁 직후 kg당 20(신권 기준)원대였던 함경북도 청진시의 쌀값이 올해 3월 중순 1000원대로 올랐다가 4월 초 500원대로 떨어졌으나 지난 5일 현재 700원대로 반등했다”면서 “이런 상승세라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다시 1천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
- 이어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 가격 강제인하와 군량미 방출 등의 조치로 쌀값을 안정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지난달 110원에서 최근 150원까지 오른 중국 위안화 환율의 상승세로 쌀값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함.
- 매체는 또 “북한 당국이 오는 9월 44년만에 열리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연일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식량 가격은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환율은 한번 상승하면 내려가지 않는 속성이 있어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 ■ 기타 (대내 경제)

- 北 평양화초연구센터, 창립(2000/7/14) 10돌을 맞으며 화초생산업체들과의 과학기술교류, 공동연구 등 화초품종 보급 사업에서 성과 이룩(7/12, 중통)
- 성천강전기공장에서 신형 전동기(전기 주파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회전수 자동보장) 개발 보도(7/15, 중방)
- 北 강령은정차재배원, 여름철 차잎 수확 시작(7/16, 중통)

#### 다. 군사

### ● 6월말 北·중국경서 양측 경비대원 총격전(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중 국경에서 지난달 말에도 북한 국경경비대원과 중국 공안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짐.



-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양강도 김형직군 인근 부대의 국경경비대원 2명이 밀수꾼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자 공중에 자동소총을 발사하며 혼란을 틈타 도주
- RFA는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국경경비대 하사관과 대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밀수꾼 2명과 국경을 넘어 중국측 밀수꾼을 기다리다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면서 “이들이 뗏목을 타고 도주하자 공안이 권총을 발사했고 북한 경비대도 응사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함.
- 양강도 혜산시 주민 최모씨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완전 무장한 국경경비대와 중국 국경공안이 출동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함.
- 문제를 일으킨 북한측 국경경비대와 밀수꾼은 현장에서 체포돼 후창군의 경비대 대대본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RFA는 또 양강도 무역관리국 간부의 전언을 인용, “북·중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이 국경경비 임무를 공안(경찰)에서 인민해방군(정규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북한 당국이 거칠게 반발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에 배치되는 것을 우려해, 국경경비대를 인민보안부 소속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라. 사회·문화

##### ● 北 홍루몽, 中 순회공연 18일 막 내려(7/12, 연합신문)

-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오는 18일 다롄(大連) 공연을 마지막으로 2개월여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린다고 화상신보(華商農報)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
- 피바다가극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샤(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천<土+川>), 충칭(重慶), 시안(西安), 텐진(天津), 창춘(長春) 등 중국의 10대 도시를 순회하며 홍루몽을 공연하였으며, 지난 5~7일에는 베이징에서 3회에 걸친 앙코르 공연에 나서기도 함.
- 피바다가극단은 이어 12~13일 이틀간 선양(瀋陽)에서 홍루몽을 공연한 뒤 다롄으로 무대를 옮겨 17~18일 중국 순회 마지막 공연을 펼치고 귀국길에 오름.
- 홍루몽은 관람료가 180 위안(3만1천 원)에서 최고 1천280 위안(22만6천 원)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매진 사례를 보이는 등 중국인들로부터 호응
- 중국 관영 신화사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홍루몽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출연 배우들 역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등 이번 순회공연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도 북한 배우들의 의상이나 취미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등 큰 관심



● 스위스시계 北수출 ‘제로’(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위층에서 선물로 많이 쓰이는 스위스제 시계가 올해 단 1개도 북한에 수출되지 않음.
- 스위스 ‘세계산업연합’의 필리프 페고라로 통계국장은 RFA에 “올해 1~5월 북한에 단 1개의 시계도 수출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고위층에서 선물로 쓰이는 스위스제 시계가 유엔의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함.
- 방송은 이 단체의 자료를 인용, 2005년 한해 2천여 개에 달했던 스위스 시계의 대북 수출량이 2006년에는 사치품 등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1718호’ 때문에 26개로 급감했으나 그 후 2007년 284개, 2008년 449개, 작년 662개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고 설명

● 수학올림피아드서 북한팀 실격(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5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북한팀이 실격. 방송은 “북한팀의 실격 사실을 IMO 운영위원회 측이 확인해줬지만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1991년 스웨덴 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실격된 바 있어, 이번에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이어 “IMO에서 두 번이나 실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면서 “이번까지 4년 연속 IMO에 참가한 북한팀은 매년 순위를 올려왔다”고 덧붙임.
- 1990년 중국 대회에 처음 출전해 19위를 한 북한은 그 후 2007년 베트남 대회에서 8위, 2008년 스페인 대회에서 7위, 2009년 독일 대회에서 5위를 기록.

● 북한 대학가에 인터넷 ‘위키백과’ 열풍(7/14, NK지식인연대)

- 단체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양 대학가에서 인터넷 ‘위키백과(위키피디아 백과)’ 내용을 출력해 만든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대학가에서 ‘재밌는 백과사전’으로 통하는 이 책(A4용지 200쪽 분량)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북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의 정치·경제·문화 분야 지식과 세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기 때문임.
- 평양외대와 김책공대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의 ‘위키백과’ 책은 그 후 김일성대, 평양의대, 평양컴퓨터기술대 등으로 급속히 퍼져 지금은 평양 모 대학의 청년동맹 간부가 빌려 볼 정도로 대학가에 널리 보급돼 있음.
-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북한 당국이 ‘진원지’인 김책공대 학생들로부터 수습 권의 ‘위키백과’를 압수하고 유통경로로 추정되는 USB 검열을 벌이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책 내용에 정치성이 없어 적발돼도 처벌은 ‘사상투쟁 무대’에서 비판받는 정도로 끝난다고 함.



- 단체는 '위키백과' 외에도 북한에서는 최근 한국과 미국 드라마 DVD가 활발히 대여되는가 하면 한국의 최신음악이 담긴 MP3 플레이어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외부문화 유입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오징어철 동해 출어 엄격 통제(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해 최근 오징어철을 맞은 동해상으로 민간인 선박이 단독 출어하는 것을 엄격 통제하고 있음.
- 이 방송은 중국인 수산물 무역상의 전언을 인용, "6월 중순부터 청진, 어랑, 김책 앞바다에 오징어떼가 나타났는데 해상 통제가 심하다"면서 "오징어철을 맞아 어로공(어부)들이 가족, 친척까지 데리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지만 보위부에서 '바다출입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함.
- 함경북도 온성의 한 주민은 "보위부에서 바다출입증을 내주지 않아 보름을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나처럼 '삿발이' 갔다가 바다에도 나가보지 못하고 허탕친 사람들이 많다"고 RFA에 말함.
- 방송은 또 "(출어 통제를 하지 않는 평소에도) 먼 바다에 나갈 때는 어선들을 3~4척씩 묶어 서로 감시하며 조업하도록 한다"면서 "이는 공해상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北...류경호텔 공사 재개 후 15명 사고死(7/16, 도쿄신문)

- 신문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1987년 착공 후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2008년 여름 공사를 재개한 류경호텔 공사 현장에서 15명의 인부가 숨졌다고 전함.
- 희생자들은 고층 외벽공사 등에 동원된 병사와 '돌격대'로 불리는 노동자들이며, 대부분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가 허술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써 1987년 류경호텔 건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숨진 인부는 모두 50여명
- 북한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평양 보통강 구역에 피라미드형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5년 뒤 자금난으로 중단했으나, 이후 2009년 4월 이집트 오라스콧이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으며 2012년 완공될 예정
- 류경호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에서 가장 높은 105층(약 300m)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김 국방위원장 가족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2012년 4월 15일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맞춰 완공될 예정

● 北, 영양부족 주민 셋 중 하나(7/18, 연합뉴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아시아판(Health at a Glance-Asia)'에서 북한은 영양부족 상태의 인구



가 세명중 한명 꼴이고 5세 미만 영유아는 네명중 한명이 평균 이하의 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의 분석결과 북한 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아시아권의 20여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탄수화물, 지방 등 에너지 섭취량은 OECD 평균이 하루 3천374kcal, 한국이 3천73kcal인데 반해 북한은 2천146kca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北방송 ‘평양·평남에 100mm ↑ 폭우’(7/18,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오후 8시 뉴스 말미에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평양시에 131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평양시 삼석구역과 강남군에 각각 144mm와 121mm가, 평안남도 용강군과 강서군에 121mm와 117mm가 내렸다고 보도
- 또 남포시에 116mm가 내리고 평안남도의 덕천군과 성천군, 속천군, 영원군, 북창군 등지에 101~106mm가 왔다고 덧붙임.
- 방송은 “서해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신의주, 평성, 사리원, 해주, 강계, 혜산, 청진, 함흥, 원산 등의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밤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며 “그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갠 날씨였다”고 밝힘.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세계인구의 날》(7/11) 즈음 7/12 ‘인구일제조사 및 재생산건강’에 관한 토론회(인민대학습당) 및 인구연구소의 ‘인구소식’ 특간호 발간 등 활동 진행(7/13, 중통)
- 北 여자축구 대표팀, 7/13 20세 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에 1:0 승리(7/14, 중방)
- 최상급 축구연맹전 4차 경기(6/10~7/17) 진행(7/14, 중통)
- 北 사회과학출판사,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 자료’ 새로 출판(7/15, 중통)
- 北, 평양 반월도 수영장·만경대 물놀이장·남포 등지에서 7~8월 해양체육월간사업 활발히 진행(7/15,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 北신문…日, 선박 검사시 무자비한 보복타격(7/13,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일본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만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신문은 이날 ‘용납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 법원이 재일 조총련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정리회수 기구에 대해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실과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점을 싸잡아 언급, 이는 “우리 공화국(북)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 말함.
- 신문은 이어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보복타격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모든 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1874호 결의 이후 일본 의회에 상정됐지만 줄곧 계류 상태에 있다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지난 5월 20일 참의원(상원)에서 통과

#### ● 日, 조선학교 학생 4만여명→8천명(7/18, 산케이신문)

- 신문은 일본의 조선총련계 조선학교 학생 수가 1970년대 4만여명에서 8천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조선총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 학생은 1970년대 160개교 4만여명에서 현재는 73개교 8천300명으로 크게 줄었음.
- 한국계 학교로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가 개설돼 있는 도쿄한국학교의 경우 조선학교로부터의 전학생은 연간 1명이 될까말까한 정도였으나 올봄에는 4명으로 늘었으며 이 학교에는 조선학교로부터의 전학생이 모두 11명 재학 중임.

#### ■ 기타 (대외 일반)

- 박익춘 외무상, 작별 방문한 駐北 독일 대사와 담화(7/12, 중통)
- 北-필리핀 외교관계 설정 10주년 즈음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7/12, 중통·평방)
- 몽골혁명승리 89주년 즈음 駐北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및 영화감상회,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가下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7/12, 중통·평방)
- 김영남, 離任 駐北 독일 대사 ‘토마스 쇠퍼’와 담화(7/13, 중통)
- 쿠바 내각수상, 6/25 김정일과 김영남에게 생일축전에 대한 답전(7/13, 중방)
- 김영남, 몬테네그로 국경절 즈음 ‘필리쁘 부야노비츠’ 대통령에게 축전(7/13, 중통)
- 김영남,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에게 재선 축전(7/13, 평방)
- 리화근 콜롬비아 駐在 北대사, 7/6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7/14, 중방)
-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이사회 총위원장, 7/8 自國 駐在 北대사 정춘근 접견(7/14, 평방)



### 3. 대남정세

- **北-유엔사, 천안함 실무회담 내일 개최(7/14, 연합뉴스)**

  -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의 대령급 실무회담이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
  - 유엔사는 14일 “북한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대령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
  - 북한군은 전날 오전 ‘행정적인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오후 늦게 대령급 실무회담을 15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보냈으며, 실무회담에는 군정위 비서장인 커트 테일러 대령과 북한군 박기용 대좌(대령)가 대표로 참석
  -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유엔사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검열단 파견)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미(북미) 군부 장령급(장성급) 회담에서 천안호 사건을 논의하자는 미군측 제의에 유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미 군부 장령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13일 10시 판문점에서 대좌급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밝힘.
  
- **北, 두 동강난 천안함 연상 포스터 배포(7/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대외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천안함 폭침을 연상시키는 선전 포스터를 만들어 주민들과 군대에 배포
  - 방송은 최근 사업차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사업가가 찍었다는 포스터 사진을 촬영 시점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공개했는데, 이 포스터에는 주먹으로 함선을 내려쳐 두 동강 내는 그래픽과 ‘덤벼들면 단매에(일격에)!’라는 선전 문구가 담겨 있음.
  - 중국인 사업가는 방송에 “북한의 무역 간부들이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 남한 정부에 대해 모략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함선을 두 동강 내는 선전 포스터는 이런 주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 사람들은 군사력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했다”면서 “특히 무역 간부들은 ‘유엔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고 말하곤 했다”고 덧붙임.
  
- **北, 유엔성명 발표 전부터 승리 선전(7/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이 나오기 하루 전부터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방송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북한 당국이 안보리 의장성명(한국시각 9일 밤 발표)이 나오기 전인 8일 오전에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승리로 자축하는 내용의 노동당 지시문을 각지에 내려보냈다”면서 “‘7월8일 지시문’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유엔무대에



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날날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밝힘.

- 평양시 모 구역 당 간부는 RFA측과 전화통화에서 "8일 오전 각 구역 당 회의실에서 의장성명과 관련된 당 지시문이 전달됐다"며 "의장성명은 우리 외교전의 승리라고 공장과 기업소마다 집중적으로 선전전을 펼치라는 지시였다"고 말함.
- 함경북도 청진시 간부도 "당 지시문은 (의장성명과 관련해) 조성된 정세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공연활동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지시문은 또 공장 기업소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이 불러야 할 노래로 '발걸음' 등 4곡을 지정해 줬다"고 전함.

### ● 통일부, '北, 임진강댐 방류 가능성 통보'(7/18,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후 2시경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
-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전날 개성시 인근 장풍군에 143mm 등 황해북도와 강원도 등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북한 전 지역에도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지난해 9월 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 우리 측 임진강 유역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남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 회담'을 개최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와 관련, 댐 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면서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고 북측은 이를 수용했음.
- 당시 북측은 회담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 ■ 기타 (대남)

-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피격사건 의장성명 채택 관련 "함선침몰 사건의 국제화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 비난 및 "검열단 수용 및 공동조사" 持續 주장(7/14, 중통·노동신문)
- 국군의 해외파병 전담부대 편성은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 강화와 해외파병책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7/14, 중방)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아세안, 천안함 사태 ‘깊은 우려’ 표명”<AFP>(7/18)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외무장관들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음.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들은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10개국 외무장관 연례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음. 10개국 장관들은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믿음과 신뢰를 증진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수단으로 논란을 해결하고 이 지역에 평화와 안보를 오래도록 촉진하기를 촉구한다”고 초안에서 밝혔음.
- 초안은 그러나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특정 주체에게 돌리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미국과 한국, 북한 등 6자회담 주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함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임.

##### ● “北, 다양한 수단 동원해 제재 회피”<UN패널>(7/17)

- 북한이 국영기업들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무기를 분해해 해외에 밀수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도통신이 16일 입수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가 북한 회사 8곳과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북한은 재빠르게 움직여 다른 회사가 이들의 활동을 대체하도록 했음.
- 한 예로 청송조합주식회사(Green Pine Associated Co.)가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해 현재 북한 무기 및 관련 물품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송조합은 인민군 경찰국의 감독하에 있음.
- 보고서는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콩고민주공화국에 밀수출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도 소개했음. 북한은 탱크를 분해해 중국 다롄항에서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영국 국적 화물선에 실은 뒤,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불도저 수리 부품 목록과 함께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에 옮겨 민주콩고로 운반했음. 보고서는 북한이 민주콩고에 기술자를 파견해 분해된 부품을 탱크로 다시 조립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실행을 보조하는 유엔 패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5월 제출됐음.

- 패널은 대북제재위원회가 8개 회사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금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단체나 개인의 수를 심히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주요 북한 단체들이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음. 패널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불법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 “北, 유엔성명 발표 전부터 ‘승리’ 선전” <RFA>(7/14)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이 나오기 하루 전부터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 이 방송은 북수의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북한 당국이 안보리 의장성명(한국시각 9일 밤 발표)이 나오기 전인 8일 오전에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승리로 자축하는 내용의 노동당 지시문을 각지에 내려보냈다”면서 “‘7월8일 지시문’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유엔무대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날날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음. RFA는 북한 당국이 의장성명 초안에 북한을 천안함 공격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계획된 선전전을 펼친 것으로 추정했음.
- 평양시 모 구역 당 간부는 RFA측과 전화통화에서 “8일 오전 각 구역 당 회의실에서 의장성명과 관련된 당 지시문이 전달됐다”며 “의장성명은 우리 외교전의 승리”라고 공장과 기업소마다 집중적으로 선전전을 펼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음.
- 함경북도 청진시 간부도 “당 지시문은 (의장성명과 관련해) 조성된 정세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공연활동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지시문은 또 공장 기업소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이 불러야 할 노래로 ‘발걸음’ 등 4곡을 지정해 줬다”고 전했다. ‘발걸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찬양가요라는 점에서 북한이 ‘외교적 승리’로 포장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후계구축 과정에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

### ● <‘6자회담 재개’ 놓고 관련국 기싸움 치열>(7/14)

- ‘포스트 천안함’ 국면에 접어들자 북핵 6자회담 재개 여부가 외교가의 핵심화두로 떠올랐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물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인 9일 내놓은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13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요구했음. 북한 역시 10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과 북한의 공세 속에 정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됨.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과 없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만 보이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북의 사과’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뇌가 읽히는 부분임.
- 외교 소식통은 14일 “정부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의 사과에 대해 ‘모호성’을 남겨두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류도 복잡함.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 또 다른 추가(대북)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시점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조치들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그동안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카드를 당장 꺼내 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한·미 양국이 애초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계획했던 서해상의 대규모 연합 대잠수함훈련의 장소와 시기, 규모 등을 놓고 계속 저울질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됨.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계산과 수싸움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6자회담 참가국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3일 베트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외교가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음. 특히 앞선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천안함 국면 이후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동안 한반도 정세를 동결시켰던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6자회담 재개쪽으로 수렴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관련국들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 ● <‘포스트 천안함’ 정책조율..출구전략 시동>(7/13)

-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북조치와 한반도 정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검토 중인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심리전, 6자회담, 남북경협 등 외교안보정책이 모두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져 ‘포스트 천안함’ 전략 마련에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임.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정부의 대북조치 등을 조율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전날 개최됐다”면서 “외교부와 통



일부, 국방부 등에서 계획한 대북조치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열린 회의에는 고정 멤버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현인택 통일부,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가 매주 목요일 열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이례적으로 앞당겨 월요일인 12일에 개최한 것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정세가 6자회담 국면으로 치달는 기류에 대응하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즉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자마자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목소리를 높이는 마당에 우리 정부로서도 뭔가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관측임.
-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한·미 연합훈련 장소와 방법 등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애초 한국과 미국은 서해에서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와 항모전단 세력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계획하고 항모 공개 일정까지 제시했으나 돌연 취소했음. 세 차례 가량 훈련시기가 연기됐다가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훈련 날짜와 참가전력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미측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훈련을 하되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핵심 전력은 서해가 아닌 동해 쪽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일단 이런 방안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도 이번 회의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국면이 일단락된 만큼 그동안 유지해온 대북조치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이에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음.
-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날 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재개 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기존 입장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 또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11곳에 설치된 확성기(대형 스피커)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MDL 일대에 주둔한 북한군의 정신전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인 확성기를 설치해 놓은 것만 해도 충분한 심리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 일차 작용했지만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배제하지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임.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은 기존 1천명에서 500명으로 축소된 체류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전략적인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를 확고히 이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체류인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 日 외상,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부정적(7/13)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은 13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오카다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미사일 발사,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천안함 침몰과 같은) 사건 직후에 회담을 재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음.
- 또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으로 기왕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6자회담의 미래는 의장 성명 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중국은 지난 주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된 이후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고 있음.

#### ● 中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해야”(7/13)

- 중국은 13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기초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중국 관리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음. 그는 “6자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직후 성명을 내



고 신속하게 천안함 침몰 사건을 매듭짓고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친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의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감안, 서해 군사훈련 계획을 동해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그는 “이 보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우리의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인 수단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지역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모순을 격화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는 행위를 많이 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이날 친 대변인의 발언은 겉으로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공식적인 반대를 선언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누그러진 것임. 그는 당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었음. 한편 친 대변인은 이날 유엔사와 북한 간의 실무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종일관 지지한다”며 “유관 각국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갈등을 줄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의 대령급 실무접촉은 북측이 행정적인 이유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무산됐음.

#### 나. 미·북 관계

##### ● “北, 美 ‘전략적 인내’ 테스트”(7/16)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을 비웃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언제까지 ‘세심하게 계획된 냉대’(studied coolness)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프랑스 뉴스통신 AFP가 16일 보도했음.
- 다음은 AFP가 ‘북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쓴 분석 기사를 요약한 것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주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규탄했지만 북한을 공격주체로 명시하지 못했고, 북한은 되레 15일 미국에 대해 북한의 연루 여부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음.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확고히 지지해왔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무장관은 다음 주 서울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발표할 예정임.



- 그러나 미국의 보다 장기적인 대북정책은 덜 분명함. 천안함 사건 이전 클린턴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전략적 인내’로 표현했음. 즉, 성급히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임.
- 미국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언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문들의 전부”라고 말했음. 글레이저는 “과거 패턴과 관행으로 볼 때 대화와 상호작용의 부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과 도발행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음. 그는 “그러나 너무 일찍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고 도발행위가 재협상으로 이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위험도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은 최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선(先) 핵 포기 후(後) 안보보장·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5일 “올바른 환경하에서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를 용의가 있으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무를 수용할 경우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임. 일부 대북감시단체들은 미국이 더욱 전향적으로 변하고 북한의 보통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함.
- 미국의 민간 북한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캐린 리 사무국장은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들 이후의 출구전략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했음. 리 사무국장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일관되게 대북 압박을 꺼렸음에도 “미국과 한국이 안보리 조치에 너무 높은 기대를 했다”며 “이룰 수 없을 만큼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결과에 실망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의 주된 외교·정치적 후원자로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정일 정권 붕괴가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촉발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는 한반도 통일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천안함이 피격당한 서해 인근에서 합동훈련도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유엔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북한과 중국을 대담하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 ● 캠벨 “北 비핵화 수용시 대화용의”(7/16)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5일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무를 수용할 경우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의 다음주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방문 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올바른 환경 하에서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런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계속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 캠벨 차관보는 천안함 규탄 유엔성명 발표 이후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 온대로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적 방법을 거부하고 한 반도 비핵화의 길을 수용한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이 취해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서울에서 좀 더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이런 협의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향후 북한에 대한 가능한 관여(engagement)의 길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 개최 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클린턴 장관의 방한 목적이 “향후의 길에 대해 매우 긴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서”라고만 언급했다.
- 그는 또 미국이 독단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여전히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깊은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 내주 2+2회담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된 매우 폭넓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클린턴 장관은 (ARF에서) 양자적 맥락뿐만 아니라 다자적 맥락에서 천안함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 (밝힐)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지도력과 냉정함, 인내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ARF 회의 뒤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 한국과 함께 할 것임을 매우 명확히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또 ARF 기간에 북한 대표단과 클린턴 장관간의 회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나 버마(미얀마)의 대표단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 이 밖에 그는 처음 개최되는 ‘한미 2+2회담’은 “오랫동안 다져온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하는 뜻이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양국간의 매우 긴밀한



정책 조율과 양국간 경제관계 논의 등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클린턴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방한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클린턴 장관이 서울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을 만나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 한편 캠벨 차관보는 북한과 미얀마간의 핵협력설과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와 관련이 있거나 이를 위반하는 버마의 행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면서 “버마 정부가 북한과의 다양한 거래에서 좀 더 투명성을 갖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는 북한과 그들 (버마)의 상업적 거래에 대해 투명한 국제적 기준의 조치들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 美의원 워싱턴 시위..북한 압박 촉구(7/15)

- 미국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이 14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 시위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대북 압박을 촉구했음. 미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날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이 주최한 시위에 동참해 미국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천안함 사태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브라운백 의원은 100여명의 시위대를 향해 자신은 캔자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상원을 떠나지만 “여러분은 북한 주민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무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일리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탄압에 대응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어 “북한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 중·북 관계

##### ● <北, 경제난에 ‘중국 의존도’ 심화>(7/15)

-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11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도 평년보다 9.3℃나 낮은 4월 이상저온으로 북한의 봄감자, 봄밀, 보리 등 하곡(夏穀)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냉해 등으로 북한의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다”며 “올해 50만~100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평양 이



외의 지역에서는 식량 배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북한의 식량·경제난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봄철 이상저온 여파 등으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임. 북한은 시장통제와 외화사용 금지 조치의 완화, 가격통제와 사재기 단속, 중국 등으로부터의 식량도입 등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실시한 화폐개혁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근본적인 생필품 공급능력이 여전히 미진하고, 식량난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다만 시장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작년 12월 1kg당 20원에서 3월 1천원대까지 급등했다 6월에는 400~500원으로 다소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음. 환율도 작년 3월 1달러당 2천원대까지 치솟았다가, 6월 700~800원대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음. 경제난이 이같이 가중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올해 1~5월 북 중간 무역은 9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식량도입도 11만t으로 41%나 증가했음.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신 압록강 대교 건설’, 중국 지린성의 ‘북 나진항 10년 이용권 확보’, 중국의 ‘대북 단체관광’ 합의 등 북 중간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북한은 특히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 평양시 현대화 사업, 주요 공장·기업소 현대화, SOC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대풍국제투자그룹 등을 통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대북투자의 위험, 낙후된 인프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식통은 또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북한은 9월에 개최될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조직을 정비하고, 당의 지도적 역할 등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로의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사회주의적 요소 차단, 주민 사상통제 등 내부 단속도 지속해 후계구도 구축과 체제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특히 북한이 9월 당 대표자회를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한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 보는 시각도 많음.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를 위해 대남 압박 및 ‘남남갈등’ 선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경제난 극복 및 후계체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 재개나 남북 대화제의 등 국면전환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 “6월말 北·중국경서 양측 경비대원 총격전”<RFA>(7/15)

-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중 국경에서 지난달 말에도 북한 국경 경비대원과 중국 공안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양강도 김형직군 인근 부대의 국경경비대원 2명이 밀수꾼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자 공중에 자동소총을 발사하며 혼란을 틈타 도주했음. RFA는 북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국경경비대 하사관과 대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밀수꾼 2명과 국경을 넘어 중국측 밀수꾼을 기다리다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면서 “이들이 뗏목을 타고 도주하자 공안이 권총을 발사했고 북한 경비대도 응사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음.
- 양강도 혜산시 주민 최모씨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완전 무장한 국경경비대와 중국 국경공안이 출동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했다. 문제를 일으킨 북한측 국경경비대와 밀수꾼은 현장에서 체포돼 후창군의 경비대 대대본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또 양강도 무역관리국 간부의 전언을 인용, “북중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이 국경 경비 임무를 공안(경찰)에서 인민해방군(정규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북한 당국이 거칠게 반발했다”고 밝혔음. 북한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에 배치되는 것을 우려해, 국경경비대를 인민보안부 소속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 <천안함 사건과 北·中관계>(7/12)

-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을 계기로 냉랭했던 북한-중국 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거의 혈맹급의 전략적 특수관계임이 다시 입증됐음. 북한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직후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해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앞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당사국들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천안함 침몰 사건을 매듭짓고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음. 북한과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결정이 끝나자마자 한반도 문제를 제재나 무력대결 대신 6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합동공세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북-중간의 합동공세는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큰 불만이 없고 이는 중국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을 방패막이 해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는 9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안보리를 비난하면서도 “이는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말한 뒤 “우리는 사건의 초기부터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의장성명에 자신을 규탄대상으로 분명하게 지목하는 내용이 없었고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 주장이 반영돼 큰 불만이 없



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노력에 고마워하는 뜻이 암시돼 있다는 분석임. 중국은 천안함 발생 초기부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민관이 한 합동국제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란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북한을 두둔한다는 논란이 있었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에 미온적이었던 북한이 직접 참가의사를 밝힘에 북한을 비롯한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북한의 1,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때 험악해졌던 북-중 관계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작년 10월 평양을 방문해 가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과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특수성이 확인됐다는 것이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의 일치된 시각임.
-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회담에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 복귀 용의를 밝혀 중국 측의 요구에 화답했음. 북-중 관계는 지나 5월초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60년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고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 말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음.
-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을 국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저력을 보여 온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특수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과의 공조아래 1년 7개월간 중단됐온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주도권을 쥐게됐음. 중국은 지난 2003년 4월 6자회담의 전신인 3자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 6자회담 재개(2006년 10월) ▲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2008년 9월9일) 등 6자회담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북문제 해결사 능력을 보여왔음.

#### 라. 일·북 관계

##### ● 日 조선학교 학생 4만여명→8천명

- 일본의 조선총련계 조선학교 학생 수가 1970년대 4만여명에서 8천여명으로 감소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조선총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 학생은 1970년대 160개교 4만여명에서 현재는 73개교 8천300명으로 크게 줄었음.
- 신문은 일본인 납치사건 등으로 북한과 조선총련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데다 조선학교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편향된 교육내용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특히 올해 들어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선학교의 학생 이탈이 가속하고 있음. 한국계 학교로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가 개설돼 있는 도쿄한국학교의 경우 조선학교로부터의 전학



생은 연간 1명 정도였으나 올봄에는 4명으로 늘었음. 이 학교에는 조선학교로부터의 전학생이 모두 11명 재학 중임.

- 조선학교 학생들이 도쿄한국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조선학교를 다닐 경우 대학진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로나 교육내용에 대한 불안도 작용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음. 도쿄한국학교에는 현재 한국의 기업 주재원과 외교관 자녀, 재일동포 자녀 등 1천100명이 공부하고 있음.

#### ● 보수단체, 日 남북자지원단체 방문 시위(7/14)

- 국내 보수단체 간 공방이 일본으로 번졌음. 최성용 남북자가족모임 회장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4명은 14일 도쿄 오토와(音羽)에 있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 앞에서 시위를 벌였음.
- 이들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회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구하는 모임이 입주한 빌딩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근거도 없이 한국 단체가 조총련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외쳤음. 이들이 이처럼 도일 시위를 벌인 것은 국내 또 다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국내 모 라디오방송에서 “박씨의 아버지가 조총련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니시오카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앞서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서 본부장에 대해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일을 명목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니시오카씨와 손을 잡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서씨가 박씨에 대해 ‘색깔 공세’를 벌인 것임.
- 이날 시위에는 1998년 탈북해 1999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는 박씨의 부친 박건길(69)씨와 이흥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장도 참가했음. 이들은 구하는 모임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전 조총련 중앙본부에 찾아가 천안함 공격을 비판하는 내용과 한국 남북자 명단 등이 적힌 전단 200여장을 건물 안으로 던져넣기도 했음.

#### ● 北신문 “日, 선박검사시 무자비한 보복타격”(7/13)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일본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만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용납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 법원이 재일 조총련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정리회수기구에 대해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실과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점을 싸잡아 언급, 이는 “우리 공화국(북)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이어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보복타격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모든 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1874호 결의 이후 일본 의회에 상정됐지만 줄곧 계류 상태에 있다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지난 5월 20일 참의원(상원)에서 통과됐다.

#### 마. 기 타

##### ● <베트남전, 美 푸에블로 납북 대응에 영향>(7/15)

- 미국 해군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베트남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14일 비밀 해제된 미 의회문서에서 드러났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비밀 해제한 1천쪽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1968년1월26일의 외교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에서 당시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사흘 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베트남전과 연관시켜서 분석했다. 러스크 장관은 “이번 일(푸에블로호 납북)은 북한이 북베트남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마도 우리 병력을 베트남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 러스크 장관은 그러면서도 푸에블로호가 납북된 이유와 선박과 승무원들이 풀려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셔먼 쿠퍼 상원의원은 “베트남전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 공화당의 칼 먼트 상원의원도 러스크 장관에게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을 끝낼 때까지 또 다른 전쟁을 벌이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러스크 장관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복할 경우 북한이 다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에블로호는 북한 해군에 나포될 당시 83명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북한측 총격으로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은 북한 억류 중 때때로 북한측에 고문을 당하는 고초를 겪고 11개월 후에야 석방됐다.

##### ● “세계가 북한에 꿈쩍 못해”<英신문>(7/15)

-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은 세계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꿈쩍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번지르한 변명(Another mealy-



- mouthed cop-out over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약한 대응을 비난했음.
- 이 신문은 “유엔이 외교적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규탄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기준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약했다”고 풀이했음. 국제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도발을 강조했지만 목표에 조금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전했다.
  - 더 타임스는 “의장 성명서는 보도자료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제재가 없는 약한 형식이며 심지어 천안함을 침몰시킨 비난 대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해 두 가지 큰 거짓말이 있다”면서 “첫째는 세계가 핵무장한 독재국가에 대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서방국 정부들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음.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외교적 해결책도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중국으로 인해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송민순 “2+2회의’로 한미 동맹전략 바꿔야”>(7/18)

-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회의와 관련, “양국이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국내정치와 분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18일 밝혔음.
-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동맹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양국이 동맹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2회의’를 통해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그는 한·미동맹의 공동목표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 등으로 규정한 뒤 “이명박, 오바마 정부가 이런 목표보다는 정권의 단기적 필요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음. 그는 “한·미는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의 ‘환자’를 치료하지는 않고 격리하고 압력을 가하며 기다리는 자세만 취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상징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지적했음.
- 송 의원은 또 “지금같이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로는 통일한국에 대한 핵심국가간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



미동맹이 지금처럼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분단을 고착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 “동해 연합훈련때 美 F-22 전투기 참가 검토”(7/18)

- 미군 당국이 이달 동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최신티 전투기 F-22(랩터)를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7월 중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F-22 전투기도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에서 F-22 전투기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다른 소식통은 “이번 훈련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천안함을 공격한 사건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미 7함대와 주일미군기지의 핵심전력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광범위한 전력이 참여하며, 연례적으로 진행돼오던 을지포커스(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개명) 훈련 등 통상 훈련 규모보다 늘려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한반도에 최초로 전개되는 것임. F-22는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북한 전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인 F-22는 지난 2006년 6월 공중전투 시뮬레이션에서 F-15, F-16 등 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들과 ‘144 대 0’으로 승리하는 등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힘.
- 날개 길이 18.9m, 폭 13.5m, 높이 4.6m로 F-15K와 비슷한 크기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2.5(순항속도 마하 1.6), 작전반경은 최대 3천 km에 달함. 최대 250km에서 직경 1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APG-77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20mm 기관포 1문,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2발, AIM-120 암람 6발, 450kg급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발 등을 탑재하고 조종사 1명이 탑승함.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작년대비 66% 급증(7/16)

- 올해 들어 5월까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일본을 추월, 한국은 세계 3번째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됐다.
- 특히 오는 9월말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약에서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농무부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가 집계한 결과 지난 5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796t(5천45만달러)이었고 올해 들어 5월까지 모두 3만7천117t(1억6천279만달러)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음. 한국의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실적은 작년 5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양적으로는 66%, 가격면에서는 94%나 급증한 것임.

- 또 이 같은 수입규모는 단일국가로는 멕시코(9만5천802t), 캐나다(5만9천755t)에 이어 세계 3위로, 일본의 수입량 3만6천698t보다 약간 많았음. 그동안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꼽혀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자리를 내줬음. USMEF는 “5월에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작년 5월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는 3배 이상, 가격 면에서는 거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음.
-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급증이 향후 한미 FTA 실무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일각에서는 미측이 이런 실적에 고무돼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을 더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반면에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인 쇠고기가 잘 팔리고 있는 만큼 한국 소비자 신뢰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선불리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음.

#### ● “서해 대잠훈련, 8월 UFG연습 전후 실시”(7/16)

-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동해 연합훈련에 이어 실시되는 서해 대잠수함 훈련은 내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서해에서 실시될 대잠수함 훈련은 8월 UFG연습(8.16~26일 예정)을 전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단 UFG연습 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 소식통은 서해 대잠훈련에 미군 전력의 참가 여부와 관련, “이달 말께 동해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7함대 항모전투전단의 일정상 미군 전력이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다만, 대잠훈련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과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잠회의에 참가하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구축함 1~2척 정도는 참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해에서 실시될 대잠훈련은 우리 해군의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I)과 1천800t급 및 1천200t급 잠수함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이 주축이 되어 잠수함 탐지, 수색, 공격훈련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해 대잠훈련은 한국군이 거의 단독 또는 주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는 것임.



-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서해상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정)의 공격으로 침몰한 만큼 서해에서 대잠수함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도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국방부 “항모참가 연합훈련 이달 동해서 실시”(7/15)

- 국방부는 15일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이달 중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브리핑에서 “현재 협의 중인 일련의 첫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개최될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 이후 연합해상훈련으로 진행되며 미국 항공모함은 동해로 전개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공식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은 일련의 훈련계획으로 양측의 상당한 전력이 참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에 의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 그는 “일단 동해에서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먼저 훈련을 진행하고 서해에서도 훈련을 할 것”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대잠훈련 등을 서해, 동해, 남해에서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훈련은 7월 중에 실시되며 첫 훈련은 동해에서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며 “올해에도 10여차례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서해, 남해, 동해에서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연합훈련은 방어목적으로 진행되며 완벽한 대비태세를 과시하고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의 협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중 동해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은 대북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 ● <한·미 연합훈련 발표에 ‘동해표기’ 논란>(7/15)

-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동해를 ‘East Sea’가 아닌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빚고 있음. 모렐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동해와 서해에서(in both the Sea of Japan and the Yellow Sea) 실시하는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렐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 외교부 관계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한 한·미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쓰고 있



는 ‘Sea of Japan’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논란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양국 동맹 차원의 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들이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도 인민일보 영문판을 통해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의 시정 촉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 <동해훈련 참가 美항모의 위력은>(7/15)

- 한국과 미국이 7월 말께 동해에서 실시할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림. 1992년 7월 취역해 지중해와 아라비아해 등에서 미군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 뒤 1년간의 함 수리를 거쳐 지난 2008년 9월부터 7함대에 배속돼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활동하고 있음.
- 그해 10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음. 비행갑판 길이가 360m, 폭은 92m에 달하며 각종 안테나 등이 설치된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1m에 이룸. 면적이 1만8천211㎡로 비행갑판에는 항공기가 60여대 이상 탑재되어 있음.
- 미 해군의 최신펙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폭기와 비행기 위에 원반을 얹은 모양의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를 탑재하고 있음. 탑재된 60여대의 전폭기는 육상 표적에 대해 하루 150여 차례 이상의 폭격을 가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원거리 표적도 공격할 수 있음. 4개의 사출장치를 통해 20초마다 함재기를 발진시키는 데 이 장치를 통해 이륙하는 전폭기는 2초 만에 24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음. 고강도 방해전파를 발사해 적군의 레이더망이나 무전기 등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기(EA-6B)와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는 헬기 SH-60F(시호크)도 주력 항공기임.
- 4척의 이지스 순양함, 7척의 구축함, 1~2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투전단을 이루고 있음. 유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함포 등 4천개의 폭탄과 전자전 장비 등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20년간 연료공급 없이 운항할 수 있는 2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최고 30노트(시속 55km)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음. 국방부 관계자는 “항모의 작전반경이 1천km에 달해 동해나 서해 어디서 훈련을 해도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 하더라도 훈련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 美전문가 “한미동맹 낡고 불필요·위협” 주장(7/15)

- 한미 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outdated) 것이며 불필요하고 위협한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됐음. 보수성향의 미 싱



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에 이득은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한반도) 방위공약을 유지할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없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날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냉전은 오래 전에 끝이 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공격적 전쟁을 지원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한국은 미국 방어에 핵심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지원이 한국 방위에 핵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동맹관계는 역내 안보를 증진시키지 않으며, (한미) 양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절제와 신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는 아프가니스탄전에 묶여 있는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훨씬 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제로 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물러날 시기”라고 주장했다.
- 한편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지원이 한국 정부에 의해 막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약함의 표현”이라면서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스티븐 린튼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희망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무엇을 제안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자유 사회의 강점은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 있다면서 민간 단체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 美, 조지워싱턴호 동해훈련 참가 확정(7/15)

-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미군 전력이 참가하는 일련의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의 동·서해안에서 순차적으로 갖기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한국군과 함께 동·서해상에서 합동으로 대(對)잠수함 훈련을 벌이기로 했다. 임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조지워싱턴호는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이미 훈련을 했던 만큼 이번에는 동해에서 훈련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오는 21일 서울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및 김태영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장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릴 '2+2(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최종 확정기로 했음. 한미 연합훈련은 21일 훈련계획 최종 확정 뒤 언제라도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달 중 연합훈련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빠르면 14일(현지시간) 중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 中 “한·미 군사훈련 반대입장 불변”(7/15)

- 중국 정부는 15일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유관 당사국이 이 지역 국가의 안보와 신뢰, 선린우호 증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유리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의 이 발언은 한·미가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동해 군사훈련을 비롯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모두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합동군사 훈련에 참가했지만 그 당시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중국 입장을 고려해 항공모함을 동해 훈련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엄중한 관심과 우려의 뜻도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사태의 진전 상황을 밀접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친 대변인은 한미의 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이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주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각기 다른 군사동맹으로 나누어져 대립했지만 현재는 시대가 이미 변했다”면서 “일개 국가나 하나의 군사동맹이 지역 안보와 안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각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신뢰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스티븐스 “오바마, 한미FTA 논의 11월 마무리지시”(7/15)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11월 까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논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혔음.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한미 FTA 문제를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정부는 한미 FTA 안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제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천안함 사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과거에 그랬듯, 앞으로도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할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북한이 행동을 통해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 “오늘날 한국과 세계를 반영하는 조율”이라며 “이는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우수한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위 태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며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對美 무역흑자 작년대비 65% 감소(7/15)

-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한국의 대미(對美) 교역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무역흑자는 65%나 감소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5월까지 한국의 대미 교역 규모는 338억6천만달러(통관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의 261억3천만달러보다 29.6%(77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무역흑자 규모는 20억달러(수출 179억3천만달러, 수입 159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7억3천만달러(수출 159억3천만달러, 수입 102억달러)보다 65%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역규모가 늘어났지만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올해 들어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대미 수출의 경우 작년에 비해 12.6%(20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56%(57억3천만달러)나 급증했다.
-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한국이 거둔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흑자는 19억2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5억7천만달러보다 16억5천만달러 줄어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미국측으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무역의 경우 한국은 39억2천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42억5천만달러를



추출한 반면에 미국차의 한국 수입은 3억3천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음.

### ● <구체화되는 한미연합훈련 계획..“이달중 실시”>(7/15)

-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조치 일환인 한·미연합훈련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그간 세 차례 가량 계획이 연기되면서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급)의 참가가 불확실하고 참가전력 규모도 축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력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한국과 미국의 군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연합훈련 계획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회담’에서 확정되고 이달 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관측됨. 다만 중국의 반발 등을 감안해 훈련 지역의 선택 등에 있어서는 ‘미묘한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됨.
- ◇ 한국군 서해, 미군 동해훈련 주도 = 연합훈련은 서해와 동해에서 진행되며 한국군은 서해훈련을, 미군은 동해훈련을 각각 주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훈련에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기로 했다”며 “여러 패키지 훈련 중 일부는 동해에서, 일부는 서해에서 전개되며 조지 워싱턴호는 동해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리 합참의 한 관계자도 “연합훈련은 동해와 서해에서 모두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군은 서해훈련을, 미군은 동해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 워싱턴호가 동해로 전개되면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도 항모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 전력으로 동해훈련이 이뤄진다는 것임. 우리 군 관계자들은 그간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로 전개되어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을 거론해 왔음. 이에 미 고위 당국자는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할 것이라는 많은 선부론 추측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지 워싱턴호가 이미 7~8개월 전에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여했지만 동해상에서는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었다”고 동해훈련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 ◇ 중국반발 무마, 훈련효과 극대화 = 미국이 조지 워싱턴호를 동해로 전개해 동해훈련을 주도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중국은 미국이 전략무기인 항공모함을 동원해 서해에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 자존심’ 차원에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 훈련이 ‘대북 군사조치’라는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항모 전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한·미는 중국의 이런 반발을 의식해 한국군은 서해훈련을, 미군은 동해훈련을 주도하는 것으로 양분화하는 묘안을 짜 낸 것으로 전해졌음.



- 더욱이 양국의 핵심 전력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이 이뤄져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임. 그러나 미국은 연합훈련계획을 결정하는 데 특정국가의 외교적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미 고위 당국자는 “훈련 위치(장소)에 대한 결정은 군사전문가들이 판단하지 제3국의 항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합동훈련의 틀을 결정하는데 중국의 자문을 받았거나 외교적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 다양한 공개·비공개훈련, 참가규모 확대 = 한·미는 동해와 서해에서 공개, 비공개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함. 특히 동해와 서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훈련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투입 전력도 차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동훈련계획은 여러 종류의 합동훈련들로 구성될 것이며 대부분은 해상훈련이 될 것”이라며 “이번 훈련에 포함되는 훈련들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며, 발표하지 않고 실시되는 합동훈련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일부 훈련들은 서해에서, 또 다른 일부는 동해에서 이뤄질 것이며, 각각의 훈련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장소, 투입 전력, 역량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7함대는 니미즈급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한 8천~9천급 순양함(카우펜스, 샤일로 등), 알레이버크급(7천~8천급) 이지스 구축함(존 메케인 등), 상륙지원함(4천~1만5천급), 버지니아급(7천~1만급) 핵잠수함(휴스턴, 버팔로)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일부는 일본 사세보와 괌기지에 배치되어 있음.
- 우리 군은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KDX-II)과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 핵심 전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합훈련은 해상기동과 해상사격, 대잠수함 훈련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대잠수함 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해상에서 북한군의 특수작전부대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특수작전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잠수함 및 특수작전훈련은 성격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상기동과 해상사격 훈련은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됨.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광범위한 전력이 참여하며 연례적으로 진행돼오던 을지포커스(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 통상 훈련 규모보다 늘려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2+2회담’서 합의, 이달내 첫 훈련 가능 = 일련의 연합훈련 시기와 참가전력 규모 등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2+2회담’에서 확정됨. 미 고위 당국자는 “오는 21일 서울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훈련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훈련이 개시될 것”이라며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수일동안의 해상훈련이 일련의 훈련들의 첫 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합참 관계자도 “연합훈련의 목적과 성



격상 ‘2+2회담’에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훈련은 이 회담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미 항모전단이 2~3일이면 동해상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마지막 주에도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한·미, 핵연료 재처리 문제 갈등” < NYT > (7/14)

-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3일 전했다.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전기의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이 줄어들고 있어 재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협정 내용을 들어 한국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불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원전 내 임시 시설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1만700t에 달하고, 2016년이면 각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 NYT는 그러나 북한,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씨름하면서 핵 재처리와 농축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은 1970년대 잠깐이나마 핵개발에 나선 한국이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확보하려 들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 농축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은철 교수는 “미국은 재처리에 반대하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북한과 관계에 따라 마음을 바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우리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양국은 오는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NYT는 미국이 새로운 협상에서도 재처리를 금지한다면 한국인은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한국 전문가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12월 200억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등 주요 원전 수출국의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에 보내 재처리를 하거나, 한국에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되 다국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NYT는 아울러 한국 기술진이 핵연료 재처리 신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을 무기화 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플루토늄도 손쉽게 무기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 반박도 있다고 덧붙였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샤론 스콧소니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가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며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도 아닌 인도가 재처리 권리를 부여받은 반면,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자 NPT 가입국인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좌절을 느



꺠만하다”고 지적했음. 하지만 미 ‘제임스 마틴 핵무기 확산방지센터’의 마일스 펄퍼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논란은 끝났다”면서 미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허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음.

### ● “한미FTA 실무협의 9월말께 시작”(7/1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9월말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FTA 실무협의 착수 시기와 관련, “아직 미국쪽과 시기에 대해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미 합의된 협정문이 있고 3~4개월간 협상할 사안도 아닌 만큼 9월말께부터 협상을 시작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음. 김 본부장은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1월 방한 이전까지 FTA 쟁점을 타결하도록 실무협의를 지시했지만 아직 미국측에서 준비가 안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또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EU(유럽연합) FTA와 관련, “EU측에서 22개 회원국 언어로 협정문을 번역하는 작업을 8월말까지는 마칠 것이라며 9월에는 정식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면서 “연내 발효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김 본부장은 한·중 FTA에 대해선 “한중 양국이 지난 5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FTA 본 협상에 앞서 민감분야 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민감분야에 대한 협의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김 본부장은 그러나 한·중 FTA 본협상 시기에 대해선 “우선 민감분야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하며 현재로서는 언제 본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음.

### ● <한미 ‘2+2회의’, 미래동맹 강화·‘출구전략’ 모색>(7/14)

- 역사상 처음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일명 ‘2+2회의’)는 그 자체로 정치·외교적 상징성이 큼.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혈맹’인 양국의 외교·안보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장(場)이라는 점에서임.
- 특히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미래 동맹을 설계해나갈 것이냐가 중심 화두가 될 것이라는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임. 정부가 ‘2+2 회의’를 추진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로 알려져있음. 미·일간 ‘2+2 회의’에 자극받은 5공화국 정부는 한·미간 ‘2+2 회의’를 겨냥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고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결실’을 맺은 셈임.
- 이번 2+2 회의가 ‘상징적 이벤트’ 효과만을 겨냥한 것은 아님. 변화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현실적 위상과 무게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관측에서임.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이완된 미·일동맹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과 ‘기축효과’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들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최대 관전포인트는 천안함 국면 이후의 ‘출구 전략’을 놓고 양국이 어떤 시각과 방향을 정리하느냐임. 이는 결국 향후 6자회담 대응과 남북대화 방향과 밀접히 관련돼있음.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를 현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탄력 적용할 것이냐가 핵심임.
- 물론 아직까지 무게중심은 ‘압박’에 놓여있음. ‘상징적 조치’에 그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동맹과 양자 차원의 ‘실효적’ 조치와 수단들이 여전히 한·미가 논의테이블에 올라와있음. 다만 양국 내부에서는 일정시점에서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조만간 6자 재개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하는 ‘연착륙’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임. 특히 2+2 회의 이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장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어 보임.
- 미국이 자체 검토해온 양자 제재조치들은 일단 유보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이며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임. 양국은 이밖에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북한문제 전반에 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조율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역내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공조선을 구축해나가는냐는 ‘미래비전 이행’ 문제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놓고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 한미 연합훈련, 2013년부터 전작권 대비체제로(7/14)

- 군당국은 오는 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체제를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14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7개월 연기되면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오는 2013년부터 전작권 전환 체제하의 신(新)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애초 올해까지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 봄과 가을에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검증하는 계획을 마련했었음.
- 소식통은 “2013년부터 2년여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체계하에서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IOC



와 FOC를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즉 내달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부터 2012년 UFG 때까지의 모든 연합훈련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해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임.
- 군당국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회담’에서 이런 구상을 협의한 뒤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나. 한·중 관계

##### ● “한미훈련, 한반도에 새위기 초래” <중장성>(7/18)

- 중국 군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잇따라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인 뤼위안(羅援) 소장은 18일 인민일보의 자체 웹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주변국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며 “그 같은 군사훈련이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3척이 아시아지역에 동시에 출현한 사실을 언급하고 미국이 중국을 동해안을 둘러싸는 ‘보름달형 방어선’을 이미 형성했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음. 뤼 소장이 밝힌 전략핵잠수함 3척은 미 제7함대 소속 핵잠수함인 미시간호(號)와 오하이오호, 플로리다호로 아시아 지역 교두보인 우리나라 부산과 필리핀 수비크만,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언급하는 것임.
-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 ‘C자형’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방국가와 공동으로 중국의 동서남북을 봉쇄하는 보름달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이 잠수함 전력의 60%가량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괌 기지에 전략폭격기도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뤼 소장은 지난 5일 홍콩 TV방송인 봉황위시(鳳凰衛視)의 ‘오늘의 뉴스 대담’ 프로에 출연해 중국은 미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겁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항모가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한 인물임.



### ● “中, 한미훈련에 아편·청일전쟁 떠올린다”(7/18)

- 중국은 서해(중국명 황해)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제2차 아편전쟁, 청일전쟁 등 과거 서해에서 외국 군대에 참패한 치욕의 역사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훈련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중국이 한미 양국의 서해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서해에서 외국 군대가 훈련할 경우 청나라 말기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돼 있다고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군사전문잡지인 ‘칸와아주방무월간’(漢和亞洲防務月刊. Kanwa Asian Defence Monthly)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이 주장했음. 창 편집장은 “서해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제2차 아편전쟁, 청일전쟁과 같은 중국의 치욕을 상징하는 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음.
- 중국은 과거 200년 동안 서해에서 88차례나 외국 군함의 침략을 받았고, 제2차 아편전쟁(1856~1860년)과 청일전쟁(1994~1995년)이 대표적인 중국의 패전 사례로 꼽힘. 영국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1856년 애로호사건을 구실로 프랑스, 아일랜드 등 8개국 연합함대를 구성해 청나라를 공격해 텐진조약(1860년)을 맺어 개방을 확대시켰음.
-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특히 서해에서 청나라 해군을 대파한 뒤 베이징(北京)에 입성해 청나라 황제 여름별장인 위안명위안(圓明園)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해 갔음.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가 자랑하던 북양함대(北洋艦隊)를 서해에서 대파한 뒤 대만을 점령하게 됐음. 창 편집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군이 사거리가 1천6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베이징과 텐진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간다고 지적했음.
- 그는 또 외국의 군대가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주요 시설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 아울러 안보전문가인 가오하이관(高海寬)씨는 서해상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불가피하게 중국과 미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SCMP는 전했다.
- 가오 씨는 “미국은 중국의 현관 계단(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이 중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 상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결을 떠올리게 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이달 중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을 실시한 뒤 서해에서도 순차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中, 한미 동·서해훈련에 복잡한 속내>(7/15)

- 한국과 미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은데 대해 중국이 복잡한 속내를 비쳤음.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 불발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한미 양국의 서해 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 서해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한·미·중 3국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4일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훈련이 서해에서 동해로 바뀔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포함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15일자에서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의식해 훈련 장소를 바꿨다”며 기존의 비난 논조를 누그러뜨렸음. 환구시보는 한미는 물론 영국과 일본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 우려를 끼칠 뜻이 없음을 암시했다”고, 세계신문보는 “(훈련 예정지를 변경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 국면이 신속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이날 한미 양국에서 항모가 참가하는 훈련은 동해에서 하되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합동훈련보다 더 많은 전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훈련을 동·서해에서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영 언론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서해 합동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항모가 포함된 동해 군사훈련을 포함해 동·서해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로 한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이는 항모가 참가하는 서해 합동군사훈련이 거론됐던 지난 8일 친대변인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는 당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 및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특히 친대변인의 이날 발언에는 과거보다 강화된 한미 전력이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자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어 보임.
-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 차단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우리 정부의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서해에서 항모가 참여하는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을 하려다가 장소가 바뀐 배경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음을 암시했음.



- 중국은 한미 동·서해 합동군사훈련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침투를 차단하는 용도의 훈련으로 비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강의 미 항모 전투단이 참가함으로써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 군사안보정보가 모조리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그 때문에 중국은 관영언론매체를 동원해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우려를 표시하고 서해 훈련 예정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무력시위성 군사훈련을 했는 가 하면 이례적으로 미사일, 유도탄 등의 발사장면이 포함된 훈련내용을 공개하는 등 한미 양국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 차단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지난 8일 처럼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동·서해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면 중국이 다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한미 양국은 오는 21일 개최될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훈련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 한국인 관광객 中 구이린서 숨져(7/14)

- 중국의 광시(廣西)장족 자치구 내 유명 관광지인 구이린(桂林)의 한 호텔에서 13일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구이린의 구이산(桂山)호텔의 경비원은 이날 오전 8시께(현지 시각) 호텔 건물 4층에서 추락해 숨진 한국인을 발견, 공안국에 신고했음. 현지 공안 조사결과 숨진 사람은 40대 초반의 김모씨로 그는 10여명의 한국인 일행과 함께 단체 여행차 구이린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현지 공안은 목격자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이 지역을 담당하는 주광저우(廣州) 총영사관은 현지 공안의 협조를 받아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며 유족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사후 처리문제를 지원할 계획임.

#### 다. 한·일 관계

##### ● 미쓰비시 “대화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7/15)

-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대해 협상 의지를 밝혔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발표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은 “협상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임.
- 일본 단체에 협상 의지를 밝힌 미쓰비시 중공업 담당자는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 단체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또 대화 파트너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쪽 단체가



아니라 “일본 단체(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화 내용이나 일정 등은 일본 단체의 얘기를 들어가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음.

###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논의”(7/15)

-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강제노역에 동원한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대해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됨.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2)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15일 오전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지난 14일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일본인들의 단체로, 이들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지원해 왔음. 시민모임은 “이번 협상 표명은 일제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 제기로부터 장장 12년에 걸친 원고 할머니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자, 일본인이면서 과오를 묵과하지 않고 24년에 걸쳐 투쟁을 계속해 온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투쟁 의지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모임은 지난달 23~24일 도쿄(東京)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등을 방문해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국회의원 100명 등 13만4천162명의 서명 복사본을 전달하고 협상 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음. 미쓰비시는 내부 논의 끝에 사죄와 보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시민모임은 이번 달 중 광주를 방문하는 나고야 소송 지원회 관계자 등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15일 이전 미쓰비시 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임. 시민모임은 또 항의 집회 등을 중지해달라는 미쓰비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반(反)미쓰비시 활동을 중단할 방침임. 그러나 시민모임은 일본 후생성 산하 사회보험청이 지난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연금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하겠다는 ‘99엔 파동’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추구하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음.
-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와 일본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번 성과가 이뤄졌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웃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민모임 김희용 대표는 “당시 강제징용된 모든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모든 진영에서 뒤틀린 역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음. 시민모임 이국연 사무국장은 “일본 항의방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며 “협상은 다음달 즈음 시작될 것으로 보



이지만 보상이나 사죄 문제 등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 라. 미·중 관계

##### ● 中 “한·미 군사훈련 반대입장 불변”(7/15)

- 중국 정부는 15일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우리는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유관 당사국이 이 지역 국가의 안보와 신뢰, 선린우호 증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유리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의 이 발언은 한·미가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동해 군사훈련을 비롯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모두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합동군사 훈련에 참가했지만 그 당시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중국 입장을 고려해 항공모함을 동해 훈련에 투입키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엄중한 관심과 우려의 뜻도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사태의 진전 상황을 밀접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친 대변인은 한미의 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이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주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각기 다른 군사동맹으로 나누어져 대립했지만 현재는 시대가 이미 변했다”면서 “일개 국가나 하나의 군사동맹이 지역 안보와 안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각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신뢰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리관유 “中 아직은 美에 맞설때 아니다”(7/14)

- 중국은 앞으로 20~30년간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맞서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는 도광양회(韬光養晦)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싱가포르 총리를 지낸 리관유(李光耀) 고문장관은 12일 중국 지도자들이 도광양회 정책에서 벗어나 굴기(崛起)하려는 것은 중국의 목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 13일 싱가포르의 연합조보(聯合早報)를 인용, 보도했음.

- 중국 고위관리들과 접촉이 잦은 리관유 장관은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 굴기정책으로 인한 자부심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고취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종합국력을 분명히 인식, 미국과 우열을 가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은 앞으로 20~30년후 경제총량이 미국을 넘어서고 과학기술력이 미국에 근접하면 미국에 대등한 관계를 요구해도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관유 장관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라고 지적하고 이밖에 빈부격차, 젊은 층의 이상 충족 등 난제가 산적해있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음. 그는 중국은 중앙은 물론 지방관리들이 모두 유능하며 국내외 정세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고 자신감에 차있다고 평가했음.

#### ● 中, 美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7/13)

-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박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과 자유, 민주 상황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친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에 자신의 국내 문제에 더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권 등의 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인위본’(以人爲本)의 정신에 따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실제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음. 미국은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2010년 ‘자유 촉진과 민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여전히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음.

#### 마. 미·러 관계

##### ● 美법무 “러시아 스파이 잠재적 위협”(7/12)

-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맞교환 형식으로 본국에 송환된 러시아 스파이들이 기밀을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11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들을 자국의 첩보활동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 수십만 달러를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홀더 장관은 또 10명의 러시아 스파이를, 서방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러시아인 4명과 맞교환한 데 대해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4명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옹호했음.



- 그는 아울러 러시아 스파이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라” 러시아로 돌아가거나 성인의 경우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자녀 문제도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평가했음. 이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NBC 방송 시사프로그램 ‘언론과 만남’에 출연,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10년 넘게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기밀 정보를 빼내지는 못했다고 말했음.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들을 오랫동안 감시했다”며 스파이들이 기밀 유출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실제 유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음.
- 기브스 대변인은 이어 미·러 관계가 최근 핵감축 협정 체결 등으로 강화됐다면서 이번 스파이 맞교환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한편, ABC 방송은 이번에 러시아로 추방된 안나 채프먼(28)이 2003~07년 영국에 거주한 사실을 전하면서 런던이 러시아 스파이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영국 왕립군사문제연구소(RUSI)의 조너선 에얄은 “미국의 러시아 스파이 네트워크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음.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 스파이들이 옛소련 시절과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런던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연방보안국(FSB)에 반발하는 러시아 신흥재벌의 주요 활동무대라는 점을 그 원인으로 설명했음.

## 바. 기 타

### ● <클린턴,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길 올라>(7/1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길에 올랐음. 클린턴 장관은 우선 내주 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열리는 아프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파키스탄에도 들러 아프간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클린턴 장관은 이어 서울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오는 23일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찾음.
-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5월 한·중·일 3개국 순방에 이은 2개월 만의 방문임. 특히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 규탄성명 채택에 이어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북한의 잇따른 입장 발표 속에 이뤄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임.
-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5일 클린턴 장관의 방한과 관련된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무를 수용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캠벨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올바른 환경하에서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이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대로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한미동맹의 평가와 미래 청사진,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억지력 강화대책, 북핵을 비롯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도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ARF 기간에 중국, 일본과의 별도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가질 예정임.
- 중국의 경우 천안함 규탄 성명 채택 이후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한미간의 연합훈련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 간의 북한문제와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예상돼 주목됨. 일단 클린턴 장관은 ARF 기간에 북한 측 대표단과는 별도의 양자 회동을 예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번 회의에 박의춘 북한 외무상 등 6자회담 참가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고, 미국에서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가 수행할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북미간의 직·간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음. 한편 미 언론은 클린턴 장관이 아프간 방문 기회를 이용해 아프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인과 함께 카르자이 정부가 올해 초 밝힌 개혁 약속 이행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오는 20일 열리는 아프간 국제회의는 아프간에서 열리는 아프간 관련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카르자이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80여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아프간 사회 재통합 방안과 치안 책임 이양 상황 등을 점검함.

#### ●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 15일 발효(7/14)

- 한국과 러시아의 불법 어업 등을 막기 위한 두 나라 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이 15일 발효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4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불법 해양생물자원의 반입을 막기 위해 두 나라가 어선 목록, 입항가능 항만 목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선박은 속초항, 동해 묵호항, 포항항, 울산항, 감천항 등 5개 항만을 통해서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음. 또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어선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24시간 전에 입항신청을 해야 하며, 러시아로부터 받은 수출정보와 대조해 이상이 없을 때만 입항이 허용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 ● 후진타오, 마잉주의 ‘16字방침’ 받아(7/12)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국민당 주석)으로부터 12일 현실을 직시하고 신뢰를 누적하여 윈윈을 창조하자는 내용의 ‘16자 방침’을 전달받았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명예주석이 후진타오 총서기를 12일 오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만나 마잉주 주석의 “현실을 직시하여, 상호신뢰를 누적하고, 공동기반을 추구하고 차이점은 제쳐 두고, 윈윈을 계속 창조하자”(正視現實, 累積互信, 求同存異, 續創雙贏)는 16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그러면서 우 명예주석은 마잉주 주석이 후 총서기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를 전했고 후 총서기 역시 그에게 마 주석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음.

- 후 총서기는 마잉주 총통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우 명예주석과 만나 양안(兩岸)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음. 후 총서기는 “최근 체결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양안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양안 관계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해 평화 발전의 기초를 닦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우보슝 명예주석도 “ECFA는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둬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음.
- 후 총서기는 그러면서 “‘대만 독립 반대’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 아래에서 평등한 협상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강화하면서 양안관계의 발목을 잡는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우 명예주석도 1992년 양안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하에서 제도화된 협상을 통해 양안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음.
- 우보슝 명예주석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후 주석과 회동을 가졌던 련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과 함께 최근 후 주석을 만난 대만의 최고위층 정치인임. 후 총서기와 우 명예주석의 회동은 공산당과 국민당 등 양안의 두 집권당 지도부 차원의 만남으로 양당 영수회담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우 명예주석은 베이징 방문에 앞서 공산당 대만사무관공실의 왕이(王毅) 주임과 함께 11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폐막한 제 6차 양안 경제무역문화포럼(논단)에 참석, 양안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22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음. 대만 언론들도 마잉주 총통이 대만 남부 타이난(臺南)현에서 ECFA 좌담회에 참석해 16자 방침을 후진타오 총서기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음.

#### ● 中·日, 5월 美 국채 보유규모 줄여(7/17)

- 세계 1~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이 5월에 나란히 미국 국채 보유규모를 줄였음.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재무부의 16일 발표를 인용, 중국의 5월 미 국채 보유액은 전달보다 325억달러(3.6%) 줄어든 8천677억달러로 집계됐고 일본의 미국 채 보유액도 전달보다 88억달러(1.1%) 감소한 7천867억달러였다고 17일 보도했음.



-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맞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간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오던 중국은 3월부터 두달간 보유액을 늘렸지만 이번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음. 미국 국채보유 규모 3위인 영국은 5월 한 달간 288억달러를 순매입, 보유액을 3천500억달러로 늘렸음. 5월 말 현재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3조9천636억달러로 전달에 비해 58억달러 늘어났음.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의 증감과 관련해 이는 시장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음.



[참고 1] <그래픽>해 대잠훈련 예상 개요(7/16)

(서울=연합뉴스) 반중빈 기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서해에서 실시될 대잠수함 훈련은 8월 UFG연습(8.16~26일 예정)을 전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 대잠훈련 예상 개요**  
 서해에서 실시될 대잠수함 훈련은 8월 UFG연습(8.16~26일 예정)을 전후로 진행될 예정

7월 말까지 7함대 항모전투전단 참가 한미 연합훈련 예정

**서해 대잠훈련**

대잠헬기, 소노부이 능동/수동소나, 대잠함 능동/수동소나

시각

해상초계기(P-3C) 시각 및 열상정비 또는 소노부이 투하

다목적 잠수함, 잠수함 수동소나

가상 적 잠수함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훈련 참가 예상 전력**

- 한국 4천500급 한국형 구축함(KDX-II), 1천800급 및 1천200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헬기, F-15K 및 KF-16 전투기 등
- 미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구축함 1~2척

**진행 순서** 잠수함 탐지 ▶ 수색 ▶ 공격 훈련

연합뉴스

반중빈 기자 bjb@yna.co.kr / 20100716

bjbin@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10071600010004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100716000100044)



[참고 2] 한미 동·서해 연합훈련 참가 예상 주요 전력(7/15)

(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한 미군 전력이 참가하는 일련의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의 동·서해에서 갖기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동·서해 연합훈련 참가 예상 주요 전력**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한 미군 전력이 참가하는 일련의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의 동·서해에서 갖기로 확정

**조기경보기(E-2C 호크아이)**  
 조기경보 명령 및 항공 관제 기체 상편에 호크아이 동군 회전 안테나 탑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p><b>韓 F-15K 전투기</b>                  길이 19.45m 너비 13.05m                  탑승인원 2명 최대중량 36,700kg                  최대속도 마하2.3                  전투반경 1,800km                  항속거리 4,445km                  탑재무기 정밀공격격탄, 벙커버스터, 공대공, 공대함 유도탄, 장거리 공재 참 유도탄</p>	<p><b>韓 순원일함(1,800t)</b>                  길이 65.3m 너비 6.3m                  승조원 40명                  수중 최대속력 37km/h                  공기불요장치(AIP) 약 2주간 수중 예사면 작전가능                  최신 전투시스템(SUS-90)                  300여 개 표적처리                  기타 소나(Sonar: 음파탐지장비), 위성통신장비(SATCOM)</p>	<p><b>美 이지스함</b>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II A형 기준                  길이 155m 너비 20.5m                  추진 LM2500 가스터빈 4기                  최대출력 10만마력                  최대속력 106km/h 승무원 340여명                  탑재무기 127mm 함포 1문, 20mm 펄러스 CIWS 2문, 324mm 3연장 어뢰 발사관 2문, 함대공(SM2), 함대지(토미호크), 함대잠-에스륙, 대잠헬기 2대</p>	<p><b>韓 KDX-II급 구축함(4500t 급)</b>                  강강전함 기준                  길이 149m 너비 17.4m                  추진 LM2500 가스터빈 4기                  최대출력 53.7km/h                  항속거리 1만2,000km                  탑재무기 하문 대함미사일과 SM-II 대공미사일, 5인치 함포 및 30mm CIWS, 슈피라스 헬기 2대 적재, 한국형 수직미사일발사기, SSM-700K 함대함미사일 등</p>	<p><b>美 조지 워싱턴호 동해 훈련 참가 (9만7천t 급)</b>                  길이 332.8m 너비 76.8m(비행갑판)                  최대출력 28만마력(A4W 원자로, 2기 증기터빈 4기)                  최대속력 55.5km/h 이상                  승무원 약 6,100명                  만재배수량 10만4천t                  탑재기 FA-18 전투기, 조기경보기, 헬기 등 90여 대</p>
---	---	--	---	---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 20100715

bjbin@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PH2010071500040004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PH20100715000400044)